

#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08.26.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가·지자체에도 부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15.8.18.)

##### 01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신설·개정 내용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지원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운영	제8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	제27조6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률(3%)에 미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33조의2 신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오류 시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도 도입	제33조의3 신설
부담금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의4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 중앙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이며,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3.73%로 의무 비율은 넘겼지만, 지방자치단체 평균(3.90%)에 비해 낮음
-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률은 2014년 6월 기준 1.17%으로 전국 7개 교육청과 함께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기도 하였음

#####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도 의무고용대상에 포함됨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17년 3.2%, 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할 예정이어서 더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지원 노력이 요구됨
- 경기도는 근무지와 거주지의 접근성 등 교통문제로 채용계획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 고려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자료 기준 : 2014년 말.

# 1.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육성법 「뉴스테이(New Stay) 3법」 국회 본회의 통과('15.8.11.)

## 01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법률명	주요 변경 내용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부문 가용 택지 공급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내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012년 2월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일몰제 적용, 정비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월세 거주가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 임대주택 공급은 제한적인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
  - 임대차거래 중 월세비중은 11년 33.0% 에서 14년 41.0%으로 꾸준히 늘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분의 임대주택은 2013년 64만 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중산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와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본격 추진
  - 뉴스테이 정책의 핵심은 장기 거주(8년)와 함께 고급서비스(육아, 청소, 세탁, 이사 등)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것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유형은 건설위탁, 매입위탁, 리츠형이 있으며, 최초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임대료는 시세 수준으로 하고 8년간 년 월세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중산층 임차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도심 내 공공부지, 내보유 토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의 부지를 기업형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
  - 금융지원정책으로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융자지원을 확대
  -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위한 세제 틀을 개편하고, 장기임대사업자 중심의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 02 경기도 대응방안

- 기업형주택임대 육성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임대사업 확대에 따라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경우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은 약 20조원 수준이며, 종사자수도 25만명임
- 거주자 친화적인 임대방식(resident-friendly rent) 개발이 필요
  - 기업형 주택임대가 건설사에게 부지매입, 도시주택기금 융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비해 입주자는 8년간의 거주보장 이외에는 시세대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수정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프트(Shift)는 실제 시중임대료 보다 50~80%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
- 미래도시의 이미지로 Next Housing 경기도형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을 구상
  - 공공자원이 투입된 만큼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가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시중 임대료의 70~80%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사업자에게 그린벨트해제 토지 매각 등의 방식 및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임대시장안정화 /내수시장활성화 기대효과

경기도형 기업형 주택임대(Next Housing) 사업 전개

# 02

##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지자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표방하며 국제인증도시 가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제인 인증도시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봄. 이번 호는 건강도시와 고령친화도시에 이어 안전도시를 소개

### 1. 안전도시

- 안전도시는 1989년 9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 대회'에서 공식 대두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 기초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WHO)'
- 국내 공인안전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를 비롯한 총 10개 지자체이며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시, 경북 구미시가 공인준비 중임
- 국제안전도시의 공인기관은 'WHO 안전도시 협력센터'이며 공인은 5년 단위로 진행됨
  - '사업착수 및 업무 협약 → 국제안전도시 공인준비도시 등재 → 안전도시 사업 수행 및 평가 →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 공인 → 활동 및 모니터링 → 재공인'의 절차로 이루어짐



- 안전도시 프로그램 : 수원시 사례

**5대 목표 :**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 웃음이 피어나는 안전한 학교, 사고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주요사업 :** 국제안전학교, 안전일기(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대상), 아동안전교실, 심폐소생술 교육,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 경기도는 수원시,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시범도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15.6.1.), 빅데이터를 반영한 CCTV 설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

### 2.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상황, 양호

-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 모니터링 결과, 인천시와 부산, 대구시, 강원도 태백시가 재정위등급인 '주의'로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6.6%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양시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18.9%	18.3%	17.6%	11.2%	11.1%	10.4%	10.2%	8.8%	8.8%	7.9%	7.2%
고양시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평택시	오산시	동두천시	성남시	양평군	부천시	구리시
7.1%	6.9%	6.0%	5.9%	5.4%	5.0%	4.9%	4.8%	4.8%	4.7%	4.5%
하남시	군포시	가평군	광명시	수원시	연천군	안성시	안산시	여주시	과천시	
4.5%	3.5%	2.9%	2.5%	2.1%	2.0%	1.7%	0.8%	0.0%	0.0%	

\*재정위등급 :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이상-주의, 40%초과 심각

\*자료 : 2014년 말 기준 지방재무 현황, 행정자치부.

###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 지역대회' 개최

-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 지역대회'가 9월 3일(목) 성남의 테헤라티지에서 실시
-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의 방향'이라는 기초강연과 유공자 표창,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

# 03

## FACT CHECK

###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3.4.30. 개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을 준비

**임금피크제**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정년 또는 정년 후 일정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의 3가지 유형

**정년보장형** : 기업이 노사 간에 합의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

**고용연장형** : 정년 퇴직 후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

**재고용형** : 정년은 바꾸지 않고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

- 정부와 재계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고용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해법이 되며, 2019년까지 18만개의 청년층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확대 효과는 적고, 고령자의 임금삭감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60세까지 정년이 늘어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유인이 없고 임금삭감으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 우리와 유사한 ‘호봉제 임금체계’를 가진 일본은 20년 정도의 충분한 논의로 임금피크제를 노동시장에 정착시킨 만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이 필요

대기업 및 공기업은 2016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적용

# 04

## 통계로 보는 복지

###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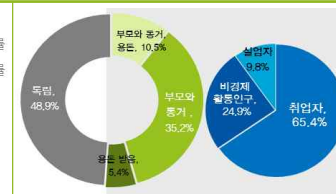
OECD 청년 고용률



한국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갭거룩족의 현황과 취업자 비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5/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 2015년 1분기 기준 OECD 회원국의 청년(15-24세) 고용률은 평균 40.1%로 한국(25.8%)은 조사대상 40개국 가운데 31위로 평균보다 14.3%p 낮음
-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0년 40.3%까지 하락하였으나, 2015년 42%정도로 회복하였으며, 실업률은 현재 9.4%를 보이고 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에 의하면, 대졸자 청년의 51.1%가 갭거룩족이며, 그 중 취업자는 65.4%로 나타나, 대졸자의 일자리 질이 낮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통장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일자리 유지를 유인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지원할 계획

\*갭거룩족 : 부모에 의존적인 청년 자녀